

민주노총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노동정책 전면 폐기하라!”

변백선 기자 | © 승인 2016.12.11 17:07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가결된 이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노동개약 정책 전면폐기, 황교안 총리 사퇴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하고 “박근혜 탄핵은 촛불혁명의 역사적 승리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앞두고 헌재심판까지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말에 “나라를 말아먹은 중범죄자의 입에서 담담하다는 말이 나오는 기막힌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가 아닌 즉각적으로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탄핵직전 세월호 특조위를 교란시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박한철 헌재소장과 사시 동기이자 삼성자본과 유착해온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에 개입하고,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며, 재벌과 공모한 뇌물죄를 조작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암세포는 뿌리까지 철저히 들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한다. 탄핵에도 불구하고 암약하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부역 총리, 부역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박근혜가 자행한 노동개약 정책, 온갖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강행,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재벌 세습 완성,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개입, 자본을 살리기 위한 살인적 구조조정, 전교조 범외노조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한일군사협정, 위안부 굴욕협상 등 박근혜와 함께 탄핵 당한 박근혜 정책은 모두 폐기 되어야 하고 쓰레기통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100만 민중총궐기로 가장 앞장서 촛불항쟁을 지켜왔듯이 즉각 퇴진과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촛불을 더 밝게 비추고, 더 크게 모아내는 것은 물론 농민, 빈민, 학생등과 함께 민중총파업으로 촛불혁명에 나선 민중의 요구를 받아 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개약 정책 전면 폐기'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개악 정책 전면 폐기'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